“대일 굴욕외교…망국적 야합 책임 묻겠다”

이재명 “가능한 모든수단 동원”
독도·위안부 회담테이블 충격
“자존심 훼손·자주독립 부정”

한·미·일 신냉전 획책 규탄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및 교수·연구자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문제는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충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인인 국민께서 행동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요미우리 신문이 허위 보도했다며 소송을 낸 것의 변론을 과거 변호사 시절에 맡았는데 이번에도 소송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또 정부,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행동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며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69시간 노동 개악 같은 엉터리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길 바란다”며 “국정의 중심을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 경제에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오섭 “도라산 통일열차 성료”
광주 북구 주민 518명 동행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20일 “광주 북구갑 도라산 통일열차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여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참가자 모집 3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국방부와 1 사단, 통일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무궁화호 8량을 특별 대여해 추진됐다.

‘오월에서 통일로’ 라는 주제 아래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있는 광주역에서 도라산역과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이르는 코스가 눈길을 끌었다.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이자 북쪽으로 가는 첫번째 역이다.

행사에는 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 권리당원 등 518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 했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지만 오늘 행사와 같이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관계, 굴욕적 친일외교를 규탄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며 “광주시민 518 명이라는 의미는 오월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평화통일로 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뜻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추진
민주, 교육위 단독의결 시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교육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청문회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의 안건도 논의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해당 안건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본인과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힘 “국회의원 증원 절대 허용 않겠다”

정개특위 ‘350명 안’ 제동
공개 반대 천명…난항 예고

국민의힘은 20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 중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당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현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17일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국회의원 증원 불가’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며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3개안에 대해 “전혀 우리 당 뜻과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권한쟁의 23일 선고
헌재, 국회통과 11개월만 판단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연합뉴스